



코스피 2002.51 (+15.50)	코스닥 627.66 (+16.93)
금리 (연이자율) 1.13 (+0.02)	환율 (1달러) 1193.70 (-20.00X2일)



[금융]
코로나에 감염된 기업
상반기 영업이익
5% 급감
05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이만희 대표, 연명희씨 호국영웅기장 받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HWPL 대표)이 김성기 가평군수(왼쪽)로부터 2016년 6월 25일 '호국영웅기장'을 수여받고 있다. /천지TV 캡처

신천지 이만희, 국가유공자 지정 의혹 포상사유 두고 논란 심의통해 박탈 가능

보훈처 “지정 여부 공개 힘들어
발굴 과정도 명확히 파악 못해”
정부 고위관계자 연루 가능성도
이만희, 기자회견서 국민께 사죄

최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국가유공자증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그 진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 등 관계기관은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의혹은 커져간다. 천지일보는 지난 2016년 6월 25일 이 총회장(HWPL 대표)이 경기도 가평군 가평문화회관에서 열린 6.25(한국)전쟁 제66주년 기념행사에서 김성기 가평군수(당시 새누리당)로부터 '호국영웅기장'을 수여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2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힘들다”면서 “(신천지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관련해) 언론들이 너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는 개인별 신청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지나, 정부의 국가유공자 발굴사업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총회장 본인이나 가

족이 신청을 했는지, 정부가 발굴해 지정을 했는지 현재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이 총회장에 대한 국가유공자 박탈과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는 “생계형 범죄를 제외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심의를 통해 박탈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복수의 보훈단체 관계자들은 국가유공자법 등으로 미뤄볼 때 이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정부 고위관계자가 연루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1931년생인 이 총회장은 2015년 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이 6.25전쟁참전유공자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법 6조(등록 및 결정), 동법 74조 5항(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익명의 보훈단체 관계자는 “7급 상이 등급을 받아야 될 정도로 국가유공자 지정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올해 89세의 고령에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이 총회장이 상이등급 7급을 받았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훈단체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법 79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이나 형법,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면서 “이미 수 많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박탈심사에 문제가 없어도 보훈처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회장은 이날 오후 3시 15분께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말 죄송하다. 뭐라고 사죄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면서 “우리도 즉각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나 정말 면목 없다”고 말하고 취재진 앞에서 큰절을 했다. 이 총회장은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정부에게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비롯해 SNS에 공개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유공자증서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하늘길 막혔다... 사실상 '코리아 봉쇄'?

외항사, 한국행 노선 비운항 선언
한국발 항공기도 착륙 불허 잇따라

외항사들이 잇따라 한국행 노선을 비운항하고 나서며 하늘길이 점차 좁아지고 있다. 한국 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커지자 외항사들이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베트남·터키 등에서는 한국발 항공기의 착륙을 불허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외국과 한국을 잇는 하늘길 전체를 막아서는 모양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동남아 지역을 국적으로 하는 항공사들이 대거 한국행을 잠정 중단하거나 축소 운항하기 시작했다. 필리핀항공은 지난 2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3월 한 달간 한국행 항공편을 일시 운휴 및 감편한다고 밝혔다. 인천-마닐라 노선은 매일 2회

에서 1회로 줄이고, 부산-마닐라는 주 7회에서 주 4회로 감편한다. 또한 ▲인천-클락 ▲인천-세부 노선은 3월 말까지 일시 운휴한다. 이밖에 베트남항공, 라오스항공, 필리핀 국적 세부퍼시픽 등도 운항을 중단하거나 일부 노선에 대해 감축 운항하기로 했다.

한국행 노선의 중단을 선언하는 외항사는 시시각각으로 늘고 있다. 홍콩 국적의 케세이퍼시픽항공은 3월 28일까지 한 달간 인천-홍콩 노선을 전면 중단하고, 에어뉴질랜드도 인천-오클랜드 노선을 6월까지 잠정 중단한다. 또한 싱가포르항공도 인천-싱가포르 노선에 대해 5월 22일까지 감편했고 일본항공(JAL)도 3월 말까지 김포-하네다, 부산-나리타 노선을 축소해 운항한다.

한국으로의 발길을 끊는 미국 국적 항공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국을 3단계(여행 재고) 지역으로 분류했던 미국 정부가 최근 대구 지역만 4단계(여행 금지)로 격상했기 때문이다. 이미 하와이안항공을 시작으로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등이 운항을 축소하거나 잠정 중단에 나섰다. 하와이안항공은 이달 2일부터 4월까지 인천-호놀룰루 직항편을 일시적으로 운휴한다. 델타항공도 ▲인천-미니애폴리스는 4월까지 운항 중단 ▲인천-애틀랜타·디트로이트·시애틀은 운항 축소하기로 했으며, 유나이티드 항공은 운항 편수를 기존보다 약 3분의 2가량 줄이기로 했다.

외항사들의 잇따른 'NO 코리아' 선언과 함께 국적 항공사들도 갑작스럽게 막히는 '하늘길'로 국제선 운항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3면에 계속)

/김수지 기자 sjkim2935@



갈 곳 잃은 항공기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나 지역이 늘어난 가운데 2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추기장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연합뉴스

추경 6.2조 편성... 긴급경영자금 2조 확대

당·정, 코로나 대응 추경 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규모를 6조 이상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이 추경 논의 과정에서 '과감한 재정 역할'을 주문한 만큼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추경 예산 6조 2000억 원(세출 예산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되는 셈이다.

당·정은 2일 국회에서 '코로나 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 협의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발언하며 울먹이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추경으로 방역 체계 보강 차원에서 피해 의료기관·격리자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음압 병실·음압 구급차와 검사·분석 장비를 추경으로 구매

해 확충할 방침이다. 코로나 19로 격리 조치 받은 입원 환자나 격리 인원 생활 지원비 등도 추경에 반영한다.

당정은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추경으로 코로나 19 피해 기업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액을 각각 2조 원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 보증도 2조 원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자 고용 유지로 부담이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저임금 근로자 임금 보조를 할 예정이다.

특히 당정은 코로나 19로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 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에 필요한 지원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기로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